

현재 판결 부당성 입증 충청권 명예회복 해야

이 창 기

(대전대 교수, 행법권 상임대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감정적 판단이었다. 현재는 대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한다는 사실에 귀를 더 기울인 것 같다. 현재는 특별법이 통과되던 작년 말 만해도 대다수 국민이 수도이전에 긍정적 견해를 보였던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재가 수도이전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더구나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이 현재판결 이전에 현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헌결정이 나오면 불복하고 데모를 주도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현재 스스로 정치집단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아마 현재는 합헌의 경우, 2300만 수도주민이 데모할지 모르고 위헌은 고작 500만 충청주민이 반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계산을 했을지도 모른다. 노대통령에게 본폐를 보여 주기 위해 들어 보지도 못한 해괴한 관습헌법이론을 끌어 들여 감정적인 위헌결정을 내린 것 같다. 따라서 현재는 관습헌법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관습헌법에 기초한 헌법소원이 붓물을 이를 터이고 자가당착에 빠진 현재는 하루아침에

그 권위를 잃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어쨌든 현재의 존재이유는 형평의 실현에 있는 것인데 이익의 다름에서 약자보다 가진 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려 아쉽다.

우리사회 모순 구조 고착화 우려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수도의 변경은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해가 가면 갈수록 수도권의 인구는 과반을 훨씬 넘어갈 게 분명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절호의 찬스를 놓쳤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한나라의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참여정부가 지난 4.15총선을 통해 사람을 바꾸었고 이제 땅만 바꾸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장애요 소로 작용하는 잘못된 기득권세력들을 와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한꺼번에 개혁입법을 도모하는 무리수를 두다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므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이 언제나 가능할지 불투명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세력들은 부나 권력의 형성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심과 아집에 사로잡혀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고질적인 한국병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번 현재의 판결로 우리 사회의 모순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현재의 권위

가 무너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냉소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다. 특히 충청권주민들의 상실감과 정신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안겨 주어 국민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바라건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원용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현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충청권의 명예가 회복될 것이다. 또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입지는 충청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충청민을 우롱한 정치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자신의 신임과 행정수도건설을 연계한 국민투표를 감행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충청권의 지도층인사들은 이런 때일수록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정신적 물질적 자산을 아낌없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위헌결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기업과 주민들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나중에 국가보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지방분권·균형발전 초석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는 신행정수도건설을 능가하는 해법이 없다. 수도권집중을 막는 방법 중에 경제력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지만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하고, 대학을 비롯한 교육문화력의 분산도 별무효과라는 사실을 공감한다면 행정권력의 분산만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 신행정수도건설이 수도권의 과밀을 덜어내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서울을 세계적인 경제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에 시큰둥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건설은 균형발전의 선도사업에 불과하고 많은 공공기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배치되고 기업도시건설을 통해 똑같이 발전한다는 믿음을 안겨 주어야 한다. 만약에 신행정수도건설이 좌절되면 수도권의 규제완화도 물거품이 되고 세계도시로 비약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행정수도 건설 없이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을 수 없고, 지방에 대한 어떠한 균형발전정책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해 지방은 더욱 더 저발전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통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제도 민족화합을 위해 세 개의 수도를 가진 남아공화국의 사례를 들어 국민들에게 성의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

끝으로 충청주민은 정치권에 또 한번 우롱 당했다는

자책과 자조에 그치지 말고 이번 만큼은 확실히 충청인의 단결된 모습을 통해 다시는 충청권을 우롱하는 정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위헌결정에 40%가 넘는 충청인들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결과는 충청권을 우롱한 사람들에게 또 한번 무시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물론 일부 충청인들 중에는 신행정수도가 올 리 만무하다고 일찌감치 체념한 사람도 있고, 집값 상승에 불편한 심기를 지녔던 서민들, 그리고 현지 일부 주민들이 신행정수도 무산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충청지역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했던 뜻있는 충청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인 만큼 충청지역의 전체가치를 위해 정치권의 우롱에 한 목소리를 내 주어야 한다.

사실 충청권에의 신행정수도건설이 당장 우리 세대에 편익을 주기 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커다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그들이 서민이든 현지주민이든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만약에 신행정수도건설이 무산된다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인은 영원히 정치권의 노리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금도 충청권은 정치적으로 소외된 곳이다. 그래서 산업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지역경제규모도 다른 곳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이번 위헌결정을 계기로 충청인이 하나로 단결하여 정치권에 책임을 묻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계기로 승화된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